

보도	2022.7.13.(수) 조간	배포	2022.7.12.(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재흥	(02-3145-8129)
		담당자	조사역	이상선	(02-3145-8526)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주요 내용

- '21년 중 **1,02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전년대비 29.1% 증가)
 -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물 차단 등 요청 대상 : 314,821건
- 적발·수집건 중 관련법규 위반·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9,877건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물 1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
- 최근 ①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②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③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I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현황

①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유관기관간 공조의 일환으로 '20.8월부터 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정보 공유



- '21년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5,965건으로 전년(794,744건) 대비 29.1% 증가(231,221건 ↑)

*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 이는 '21년 중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20.8월~12월 중 : 86,746건 → '21.1월~12월 중 : 563,748건)한데 주로 기인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

제보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불법금융광고 수집건수	271,517	100	794,744	100	1,025,965*	100	+231,221	+29.1
① 시민감시단 제보	249,145	91.8	187,785	23.6	170,788	16.6	△16,997	△9.1
② 일반 제보	22,372	8.2	17,316	2.2	13,679	1.3	△3,637	△21.0
③ 감시시스템	-	-	502,897	63.3	277,750	27.1	△225,147	△44.8
④ KISA	-	-	86,746	10.9	563,748	55.0	+477,002	+549.9

*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물 차단 등 의뢰 대상 : 314,821건

②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

-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치를 의뢰

- [전화번호 이용중지] '21년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

* ①불법대부광고 관련 19,862건, ②통장매매광고 관련 15건

-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1,305건) 대비 8,572건 증가(75.8% ↑)
-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順

-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 31.9% ↓)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 ↑)

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증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전화번호 이용증지	13,709	100	11,305	100	19,877	100	+8,572	+75.8
① 전단지	11,054	80.6	8,675	76.7	7,247	36.5	△1,428	△16.5
② 팩스	1,032	7.5	700	6.2	477	2.4	△223	△31.9
③ 문자메시지	1,058	7.7	1,459	12.9	11,941	60.0	+10,482	+718.4
④ 인터넷, SNS 등	565	4.2	471	4.2	212	1.1	△259	△55.0

※ 중복 제보접수, 조치의뢰 前 전화해지(결번) 등으로 인해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와 조치의뢰 건수 간에 차이 발생

- [게시글 차단 등] '21년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
-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10,641건 → 16,092건, 51.2% ↑)
-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順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조치의뢰 건수	16,356	100	10,641	100	16,092	100	+5,451	+51.2
① 불법대부	8,010	49.0	5,225	49.1	8,951	55.6	+3,726	+71.3
② 개인신용정보 매매	838	5.1	1,176	11.1	2,707	16.8	+1,531	+130.2
③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	14.5	1,270	11.9	1,923	12.0	+653	+51.4
④ 신용카드 현금화	2,036	12.4	1,258	11.8	976	6.1	△282	△22.4
⑤ 통장매매	828	5.1	534	5.0	922	5.7	+388	+72.7
⑥ 작업대출	2,277	13.9	1,178	11.1	613	3.8	△565	△48.0

II 불법금융광고 주요 특징

①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
 -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
 - 소비자와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 이외에도 ①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②중개수수료 편취, ③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악용하는 사례 발생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새정책 특별지원금 안내】
[Web발신]
(광고)경영위기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직장인 등
금융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 역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마감 전 빠른
신청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취급안내
-취급기관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외(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수) 18시까지
*서류 누락시 지원기한 내에 보완이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시 대출 신청 철회 됩니다.

☐ 자격대상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내국인
-직장인, 일용직, 주부, 사업자, 프리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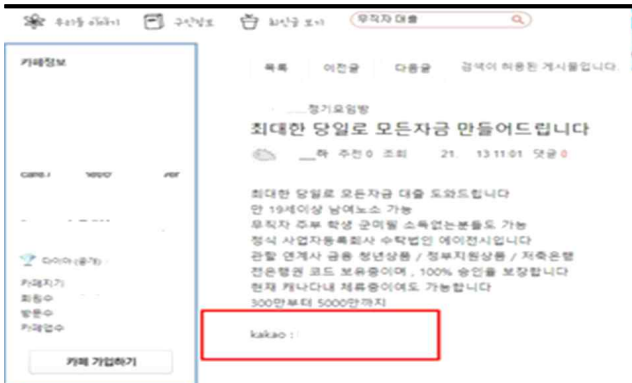
- 제목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 악용
-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 내용으로 오인 하도록 지원기관 범위,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

②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 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

-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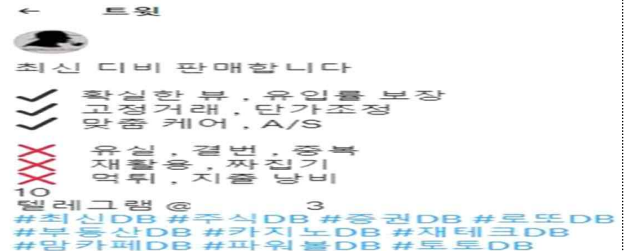
-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불법대부 상담 관련 광고 게재
- 게시물 하단에 카카오톡ID 등을 게시하여 1:1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
- 게시물에 정부지원상품,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 직장인,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

③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증가
-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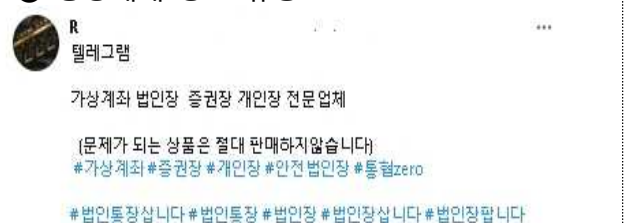
불법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광고 유형

① 불법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유형



- Database를 건당 10~50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담 후 거래
- “정확한DB”, “짜깁기X”, “유사투자자문업 경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유인

② 통장매매 광고 유형



- 통장 매매시 건당 10~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임대료 지급 등을 약속
- 입출금이 자유롭고 송금한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거래
-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

Ⅲ 불법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 이러한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세요

☀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 SNS 등 특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법대부(대출)상담을 유도

- 특히, 카카오톡ID, 텔레그램 ID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

☞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
-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 상담내역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금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대출은 받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이용하세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가능(<붙임2> 참조)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24%를 적용

💡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연 이자는 관련법상 20%('21.7.6. 이전 계약건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 내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 파인(fine.fss.or.kr)의 '서민금융1332(www.fss.or.kr/1332)' 클릭하여 '서민금융지원' 탭에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1397)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할 수 있음

☑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하세요

💡 온·오프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 지자체 ·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붙임3> 참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붙임1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유형1 불법대부광고(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고)

광고행태

- ☑ 무직자, 대학생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
 -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여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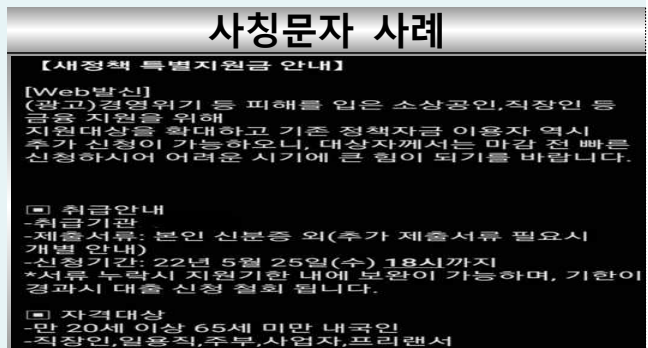
☑ 소비자 유의사항

-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상식을 벗어난 문구(누구나 대출 등) 또는 은어(급한불, '월변' 등) 등을 사용하며, 이는 불법고금리 등 대출사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채심)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활용*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또한,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유형2 불법대부광고(사칭문자)

광고행태

- ☑ '새정책 특별지원금',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상 공인 등을 유인
 -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내용으로 오인하도록 지원기관 범위,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



💡 소비자 유의사항

- ☐ 정부, 금융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

- ☐ 불법업자 등과 상담으로 인해 개인정보 등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

* 파인(fine.fss.or.kr)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대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가 제한됨**

유형3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광고행태

- ☑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여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
 -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신불자 대출”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작업대출 광고사례

대출한도 짝차있으신, გადა조회걸리신분
법인영업,사업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신분
소득증빙이 어려우신분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라인 작업대출 전문

 **농협**
 *최대대출 한도 500~3000만원
 *연 19%이상 금리 적용가능
 *보증액 10% 이내 무보증대출 가능

 **농협**
 *최대대출 한도 500~3000만원
 *연 19%이상 금리 적용가능
 *보증액 10% 이내 무보증대출 가능

 **농협**
 *최대대출 한도 500~3000만원
 *연 19%이상 금리 적용가능
 *보증액 10% 이내 무보증대출 가능

 **농협**
 *최대대출 한도 500~3000만원
 *연 19%이상 금리 적용가능
 *보증액 10% 이내 무보증대출 가능



2

가장 먼저 좋아하실거예요

20년

③ 댓글 달기...

소비자 유의사항

-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하여 위·변조된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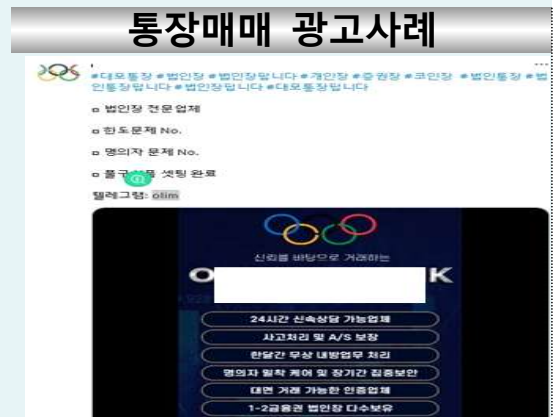
(공문서 등의 위·변조 및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 및 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4 통장 등의 매매

광고행태

-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 소비자 유의사항

- ☐ 통장 등 매매의 경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 파인(fine.fss.or.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하여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클릭하여 확인



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붙임3

불법금융광고 신고 방법

1 불법대부광고(명함광고, 문자메시지 광고)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

✓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으로 접속 후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명함광고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캡처 등 증빙자료 필요



2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

* 게시물 URL 및 관련 게시 내용을 캡처한 증빙자료 필요



붙임4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 ① (유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사금융신고센터 연결)
-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

[참고] 온라인 상담 화면

신고대상	신고내용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자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대출(LTV 등 한도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불법 행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③ (채팅)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 내 '제보신고'

[참고] 채팅 상담 화면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2
- 내방상담 :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지원
- 채팅상담 : 장애통증질환 등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담

[채팅 바로가기](#)